

천문학적 피해 ‘MB 사자방’ 링 오른다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감사 2주째...與 댕글공작·자원외교·4대강 집중 추궁 野 최저임금·탈원전 정조준...‘과거 vs 현재’ 대격돌 예고

국회는 지난주 국정감사를 했지만 여야 간 정치공방 탓으로 다소 ‘맥 빠진 국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주에도 국감을 이어가는 여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적폐 청산, 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예상만큼 날선 검증을 하지 못했다 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의 경우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 댕글공작 등에 대한 검증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에 대한 공세를 예고 했지만 여야 간 큰 충돌 없이 지나갔다. 특히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정이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전·현 정권의 안보실장 증인 출석이 불발되면서 ‘맥 빠진 국감’이 됐다.

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 역시 여당의 ‘방송 적폐’ 청산 주장과 한국당의 ‘방송 장악’ 주장이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조용히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지만 모두 불참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적폐, 신적폐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일부 파행되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와 국산편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국감이 지연됐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상향보고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파행됐다.

2주째를 맞이한 이번 주 국감에서도 여야는 적폐 청산과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 이슈가 있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또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국감도 있어 여야 간 공방에 거세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16일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벌였던 ‘댕글 공작’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노동위의 1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날 각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16일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준식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국감에는 보이콧 없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정치 보복의 위법·타법성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국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z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주선 “재외한글학교 교원 10명 중 7명 무자격자”

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초 한글교육 기관인 재외한글학교의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 교원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국회 회 부의장)에게 제출한 ‘재외한글학교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한글학교에 있는 총 1만5877명의 교원 중 비전문 교원은 1만1948명으로 75.3%에 육박했다.

지역별로 보면,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비전문교사의 비율은, 중남미 80.4%(738명 중 593명), 북미 79.3%(9951명 중 7896명), 아중동 73.9%(364명 중 269명), 유럽 71.5%(944명 중 675명), 대양



주 69.8%(86명 중 625명), 러시아CIS 68.5%(648명 중 444명), 아주 61.9%(2,336명 중 1,446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재외한글학교에 비전문교사 비율이 매우 높아 각 재외한글학교의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현재 운영 중인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의 이수가능자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표준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홍보·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jzjkpark@kwangju.co.kr

천정배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해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염병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화로 전환해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천정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도·불거리 감염병 자동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기관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



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라며 “복지부가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을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화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주홍 “해수부 고위간부·예산, 영남·부산 집중”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들이고, 해수부 예산도 3년간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해수부의 영남 편중, 부산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수부 장·차관과 실·국장 17명 중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면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35명(공석 제외) 중 15명(43%)도 영남 출신이라는 점, 역대 해수부 장관들도 20명 중 13명(65%)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해수부 인사의 영남 편중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도 부산으로 집중돼 부산-



광양의 양항체계(Two-port system)는 허를 찌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최근 3년 간 (2015년 ~ 2017년) 부산항 예산은 9705억 원, 광양항 예산은 655억 원으로 부산항이 광양항보다 14.8배나 많다”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상 항만별 사업비 투자 계획에서도 전체 투자액(14조 6412억 원)의 34%(4조 9847억 원)는 부산항에, 4.3%(6,347억 원)는 광양항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인사와 예산에서 특정 지역만 키운다면, 해양강국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수 통합 이번주 분수령 朴·바른정당 탈당 실행 ‘변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비롯한 보수야당 진영의 재편 움직임이 이번 주 중대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와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등 주요 변수들이 이번 주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변수 가운데 첫째는 오는 17일 또는 18일 개최 예정인 한국당 윤리위원회다. 한국당은 이번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친박계 현역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선출직이어서 인위적인 출당 조치가 어려운 만큼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징계 절차가 예상된다.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지를 포함한 친박계 인적정산을 보수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당의 인적정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바른정당에서는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당은 이미 김성태·이철우·홍문표 의원을 통추위원으로 선정해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16일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추위는 한국당 3명, 바른정당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며 바른정당 통추위원으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영우·김용태·황영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형호기자 khh



바른정당 보수통합 토론회 15일 서울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보수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혁신위, 시도당·지역위원장 사퇴 뒤 재신임 제안

“지방선거 앞 혁신 필요”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차당위원회는 15일, 조직 혁신을 위해 지방선거 이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뒤 재신임 방안을 제안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혁신안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당내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전원 사퇴를 통해 조직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제2차

당에 즈음해 정해진 임기에도 마땅히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국민의당 혁신의 주체로서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앞장서기를 요청한다”며 “중앙당 정예화와 시도당 역량강화, 지역 풀뿌리 기반 확대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새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내 반발과 격정도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교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없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세력들이 우리 당과 합류하려 할 때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며 개방성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3일 김태일 제2차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는 견장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작성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 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